

《한·미 협상의 분기점: 동맹인가, 거래인가》

서론: 낡은 규칙의 종언

냉전 종식 이후 세계를 지배했던 자유 무역과 세계화에 대한 낙관적 합의는 이제 막을 내렸다. 세계는 ‘기술 민족주의(techno-nationalism)’와 ‘지정경제학적 경쟁(geoeconomic competition)’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으며,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경제 정책은 국가 안보 전략의 연장선이 되었다.¹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미국과의 무역 및 투자 협상은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다. 이는 동맹국과 경쟁자의 경계가 모호해진 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성격을 시험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본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협상을 다섯 가지 핵심 의제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압박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먼저 타결된 미·일 합의의 구조를 해부하여, 이것이 한국에 대한 압박의 ‘청사진’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헤친다. 셋째, 이러한 압박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을 평가하고, ‘산업 주권’의 관점에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넷째, ‘트럼프 2기’라는 잠재적 미래가 가져올 통상 질서의 격변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도전을 종합하여 한미 동맹이 신뢰의 시험대를 넘어 진정한 상호주의 관계로 재구조화되기 위한 조건을 탐색한다.

이 모든 분석의 중심에는 “동맹인가, 거래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놓여 있다. 이번 협상은 한미 관계가 공유된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고한 동맹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비용과 이익으로 계산되는 냉정한 거래 관계로 전환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사적 갈림길이 될 것이다.

아젠다 0. 글로벌 경쟁의 새 질서 – 왜 지금 미국은 한국을 겨냥하는가

미·중 기술패권 2단계: 동맹 관리의 정치경제학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실리콘 커튼(Silicon Curtain)'이 내려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² 이 경쟁의 본질은 더 이상 시장 점유율 다툼이 아니다.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등 21세기 경제와 안보의 근간이 될 핵심 기술의 주도권을 누가 쥔 것인가의 문제다.³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이하 반도체법)'과 같은 강력한 산업 정책을 통해 동맹국 관리의 새로운 정치경제학을 선보이고 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를 위해 527억 달러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동맹국을 향한 날카로운 전략적 의도가 숨어있다.⁴ 법안의 핵심은 '가드레일(guardrail)' 조항으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⁶

이는 중국에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를 운영 중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딜레마를 안겨준다.⁷ 미국의 보조금을 받자니 중국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포기하자니 보조금으로 무장한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것이다. 결국 이 정책의 효과는 단순한 제조업의 미국 내 회귀(reshoring)를 넘어, 동맹국인 한국의 기업 전략을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에 강제로 정렬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워싱턴은 동맹국들에게 미국 시장 및 기술 생태계와 중국 생산 기지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함으로써, 사실상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동맹 관계의 역학에 있어 심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동맹국을 독립적인 경제 주체에서 미국 주도의 '기술-민주주의 블록'의 구성 요소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다.

‘투자=안보’ 시대의 도래: 한국이 전략적 요충으로 떠오른 이유

미·중 경쟁의 심화는 '국가 안보'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했다. 전통적으로 군사적 방위에 국한되었던 안보의 범위는 이제 경제적 회복탄력성, 공급망의 안정성, 그리고 기술 리더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⁸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더 이상 순수한 경제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같은 강화된 심사 제도를 통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받는다.⁹ 과거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었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이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잠재적 취약점으로 인식되고 있다.¹²

이러한 '투자=안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동맹국의 핵심 가치는 군사적 기여뿐만 아니라, 미국 중심의 안전한 공급망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의해 결정된다. 특정 경쟁국(중국)에 핵심 부품이나 시장을 과도하게 의존하는 동맹은 이제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적 부채(strategic liability)'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좋은 동맹'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과거 한미 동맹은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의 존재로 정의되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으로 대표되는 경제 관계는 이와는 별개의 트랙에서 움직였다.¹³ 그러나 팬데믹과 중국의 부상으로 드러난 공급망 취약성은 이 두 트랙을 하나로 융합시켰다. 이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의 통제는 군사 장비만큼이나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¹⁵

미국이 한국의 산업 기반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었다. 더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급처가 아니라, 중국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⁷ 따라서 현재 미국이 한국에 가하는 압박은 단순히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통상 분쟁이 아니다.¹⁸ 이는 한국이라는 전략 자산을 미국 중심의 궤도 안에 확고히 묶어두고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차단하려는 국가 안보적 절박함의 발로다. 이것이 바로 지금,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정조준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아젠다 1. 미·일 합의의 내막과 '한국 압박'의 구조

대출보증 vs 현금투자: 워싱턴의 이중 메시지

최근 타결된 미·일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는 향후 미국이 동맹국들과 맺을 경제 관계의 '청사진'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합의의 핵심은 일본이 5,5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그 관리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의 감독하에 미국이 통제하는 특수목적법인(SPV)이 수행한다는 것이다.¹⁹

그러나 이 합의의 가장 전례 없고 충격적인 부분은 수익 분배 구조다. 일본이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지만, 투자금 회수가 끝난 이후부터는 미국이 90%, 일본이 10%를 가져가는 파격적인 조건이다.¹⁹ 또한, 일본이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거부할 권리는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위협 앞에서 사실상 무력화된다.¹⁹

이 구조는 전통적인 의미의 '투자'가 아니다. 이는 미국이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정치적 위험을 제거해주는 대신, 동맹국이 자본을 제공하는 일종의 '주권 벤처 캐피탈(sov​​ereign venture capital)' 모델에 가깝다. 90대 10이라는 수익 분배 비율은 이 거래의 본질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일본이 미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과 안정적인 안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일종의 '비용'임을 드러낸다. 허드슨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투자는 지분 투자라기보다 미국이 초기 수익의 50%로 상환해주는 '채무'의 성격이 강하며, 장기 수익의 10%는 일종의 '이자'에 해당한다.¹⁹

이 모델은 이제 한국에게 동맹 경제 협력의 새로운 표준으로 제시되고 있다.²² 이는 한국이 단순히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 동맹 관계의 재정의라는 거대한 압박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과 한국의 ‘차등대우’는 우연인가, 전략인가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동일하게 15%의 기본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양국이 짚어진 부담의 무게는 현저히 다르다.²³ 이는 우연이 아닌, 미국의 정교한 ‘전략’의 결과로 분석된다.

아래 표는 일본과 한국의 협상 결과를 주요 지표별로 비교한 것이다.

지표	일본	한국	분석 및 시사점
총 투자 규모	5,500억 달러	3,500억 달러	액면가는 일본이 높지만, 경제 규모 대비 부담은 한국이 훨씬 큼
GDP 대비 투자 비율	약 14%	약 20%	한국의 경제력에 비해 과도한 투자 요구가 이루어졌음을 시사 ²³
기본 상호관세율	15%	15%	표면적으로는 동등 대우를 받았으나, 실질적 영향은 다름
자동차 관세 충격	2.5% → 15% (+12.5%p)	0% → 15% (+15%p)	KORUS FTA의 핵심 혜택이었던 무관세가 사라져 한국의 충격이 훨씬 큼 ²⁵
핵심 분야 양보	쌀 시장 부분 개방	쌀·소고기 시장 보호 성공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중요한 ‘레드라인’을 지켜낸 성과 ²³

투자 수익 분배	미국 90% : 일본 10%	유사 조건 요구받음	동맹국 자본을 활용한 미국 산업 재건이라는 모델의 핵심
전략 프로젝트	알래스카 LNG 공동개발	MASGA 조선업 협력	각국의 산업 구조와 미국의 필요가 맞물린 전략적 연계

이러한 ‘차등 대우’는 미국의 ‘조정된 압박(calibrated coercion)’ 전략의 일환이다. 워싱턴은 각 동맹국의 경제 구조, 취약점, 그리고 정치적 저항 의지를 면밀히 계산하여 맞춤형 요구를 하고 있다. 특히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15% 관세 부과는 KORUS FTA의 가장 큰 혜택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한국 수출 경제의 심장부를 겨냥한 의도적인 타격이다.¹³ 이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한국 자동차에만 무관세가 적용되었던 상황을 되돌리려는 계산된 압박이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어떤 정부도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정치적으로 수용 불가능하다는 ‘레드라인’을 인지하고, 이 부분에서는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²³ 이는 미국의 협상 전략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보여준다. 즉,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에서는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동맹국의 정치적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민감한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승리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접근이다.

‘희생양’이 아닌 ‘핵심 파트너’로의 전환 조건

현재의 협상 구도는 한국을 미국의 산업 재건을 위한 자금 조달처, 즉 ‘희생양’으로 전락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에서 벗어나 동맹의 ‘핵심 파트너’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방어를 넘어 능동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의 어젠다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한국의 조선업이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²⁶ 이는 미국의 안보 수요와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결합하여, 양국 간 산업 동맹을 심화시키는 구체적인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

둘째, 군사적 전문성과 신뢰에 기반한 안보 협력의 심화가 경제 분야의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북핵 고도화, 미·중 전략 경쟁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확인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에서도 상호 존중에 기반한 논의를 요구해야 한다.²⁷

셋째,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으로부터 비슷한 통상 압박을 받고 있는 국가들과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개별 협상에서 불리함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²⁸ 이는 한국이 고립된 협상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통상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행위자임을 보여주는 길이기도 하다. 결국 ‘희생양’에서 ‘핵심 파트너’로의 전환은,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비전과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느냐에 달려 있다.

아젠다 2. 한국 정부의 대응 평가와 전략적 재정비

‘버티기’의 명암: 단기적 방어 vs 장기적 리스크

미국의 거센 통상 압박에 맞서 한국 정부는 ‘버티기(enduring)’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전략의 밝은 측면(明)은 미국의 최대 압박에 즉각 굴복하지 않고 협상의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이다.²⁹ 이는 한국이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워싱턴에 보냄으로써,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어두운 측면(暗)은 훨씬 심각한 장기적 리스크를 동반한다. 협상이 장기화될수록 한국 기업들이 겪는 불확실성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불확실성은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³⁰ 실제로 미국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버티기’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³¹

정부의 ‘버티기’ 전략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시간표에 기댄 고위험 도박이다. 이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일시적인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이나 한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자국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면 결국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현재 워싱턴의 기류를 과소평가한 것일 수 있다.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산업을 재건하려는 미국의 지정경제학적 전략은 이미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단순한 정치적 변덕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 정책 방향이 구조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정치적 날씨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산업은 지속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으며, 미국은 입장을 바꾸기보다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도박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

돈보다 물을 지켜야 하는 이유: 산업주권의 관점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라는 투자 액수가 아니다.³²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협상을 통해 만들어질 ‘선례(precedent)’, 즉 ‘규칙(rule)’이다. 만약 한국이 미·일 합의 모델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이는 자국의 경제와 기술 발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산업 주권(industrial sovereignty)’의 일부를 내어주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산업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정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³³ 이는 미국의 자본 요구에 맞서, 한국의 자본이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협상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산업 정책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미국은 무역 압박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산업 정책(반도체법 등)에 자금을 대도록 강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종속’을 거부하고, 자국의 산업 정책을 위한 자본과 통제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이 싸움의 결과는 한국의 세계적인 기술 산업이 미래에도 ‘국가 자산’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거대한 지정경제학적 전략에 편입된 ‘하부 부품’으로 전락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규칙’을 지켜내는 것이다. 만약 미국의 모델을 수용한다면, 미래에 차세대 반도체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 결정하는 주체가 삼성의 이사회나 한국의 정책 당국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산업 주권 논쟁의 핵심이다.

협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컨센서스 구축 방안

효과적인 대외 협상은 통일된 국내 여론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하다. 정부는 ‘대미통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는 등 국내 컨센서스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²⁶ 피해 기업 지원, 산업 정책과 통상 협상의 연계, FTA 이행 채널을 통한 문제 제기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도 모색 중이다.¹²

그러나 진정한 협상력은 정부 주도의 노력을 넘어, 사회 전반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될 때 발휘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협상을 특정 정파의 유불리 문제가 아닌,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경제 안보’의 문제로 규정하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 기구를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³⁵

강력한 국내 컨센서스는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한다. 협상 대표단이 국내의 통일된 반대를 이유로 특정 양보안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반대로 국내 여론이 분열되어 있으면, 상대방은 특정 산업계에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분할 통치(divide and conquer)’ 전략을 구사하여 우리의 단일대오를 무너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에는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면서도 조선업에는 ‘MASGA’ 프로젝트와 같은 당근을 제시하여 산업계 내부의 입장을 분열시킬 수 있는 것이다.²⁶ 따라서 초당적, 범국민적 합의를 통해 우리 측의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하고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야말로,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아젠다 3. 트럼프 2기 통상 질서와 기업 생존전략

미국 우선주의의 재가동: 정책·법률·여론 리스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한국 기업들에게 전례 없는 수준의 복합적인 리스크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위협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교역 상대국의 관세율에 맞춰 보복하는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³⁷ 둘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및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³⁸ 셋째, 이러한 정책들이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극심한 정책적 변동성에 노출될 것이다.³⁹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삼중고(trifecta of risk)’를 의미한다.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비용은 급증하고(관세 리스크), 미국 내 생산을 위한 인센티브는 사라지며(보조금 리스크), 이 모든 것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정책 변동성 리스크) 최악의 경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IRA 세액공제를 믿고 미국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투자를 결정했다고 가정해보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IRA를 폐지하고 동시에 25%의 자동차 관세를 부과한다면, 해당 투자의 사업성 분석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시대에 기업이 마주할 핵심 과제는 단순히 비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 불확실성(radical uncertainty)’을 관리하는 것이다. 수십 년간 글로벌 무역을 지탱해 온 법률과 정책 프레임워크가 순식간에 무시되거나 해체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정치적 리스크 분석과 대관(government relations) 업무가 더 이상 부차적인 기능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이 될 것이다.

글로벌 생산망의 ‘정치적 리밸런싱’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정치적 리밸런싱(political rebalancing)’을 서둘러야 한다. 이는 단순히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옮기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을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다지역(multi-regional) 전략으로 진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핵심 전략으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활용하기 위한 멕시코로의 '니어쇼어링(near-shoring)',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그리고 아세안(ASEAN)이나 인도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거점 국가에 투자하여 시장과 생산 기반을 동시에 다변화하는 전략 등이 있다.⁴¹ 최종 목표는 어떠한 정치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회복탄력성 있고(resilient), 중복적이며(redundant), 정치적으로 방어 가능한(politically defensible)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⁴³

미래의 최적 공급망은 더 이상 비용 효율성만으로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정치적 회복탄력성'이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안정적인 동맹국에서 약간 더 비싸게 생산된 제품이, 갑작스러운 관세나 수출 통제 리스크에 노출된 지정학적 위험 지역에서 싸게 생산된 제품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이는 순수한 비용 기반의 최적화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과거의 공급망이 저비용을 찾아 움직이는 '물의 흐름' 같았다면, 미래의 공급망은 지정학적 단층선을 피해 흐르는 '용암의 흐름'과 같을 것이다. 높은 운영 비용은 이제 파국적인 정치 리스크에 대비하는 '보험료'로 인식되어야 한다.

정부-기업 간 위기 대응 협력 모델

새로운 통상 환경은 정부와 기업 간에 훨씬 더 깊고 기민한 협력 모델을 요구한다. 과거처럼 정부가 규제하고 기업이 따르는 일방적인 관계로는 생존할 수 없다. 이제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기업을 보호하고,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시장 접근을 위한 큰 틀의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²⁸ 반대로 기업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정부에 제공하고, 전략적 투자 결정을 통해 정부의 경제 외교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고위 관료와 핵심 전략 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는 '경제안보위원회'와 같은 상설 협의체를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²⁶ 지정경제학 시대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 주체가 아니다. 그들은 국가의 '전략 자산'이자, 동시에 외세 압력의 '전략 목표'가 된다. 이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외국의 압력에 취약하게 만드는 동시에, 국가적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가하면 이는 삼성의 중국 공장에 즉각적인 타격을 준다.⁷ 이때 한국 정부가 미국과 효과적으로 협상하기 위해서는 삼성으로부터 기술적,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시간 정보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삼성이 텍사스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투자 결정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더 넓은 범위의 협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가 된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은 서로의 생존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공생 관계에 놓여 있다. 정부는 기업의 깊이 있는 정보 없이는 효과적인 경제 외교를 펼칠 수 없고, 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지원 없이는 지정학적 격랑을 헤쳐나갈 수 없다.

아젠다 4. 한미 동맹의 재구조화 – 신뢰의 시험대

경제 동맹의 이면: 안보보다 강한 이해관계

한미 동맹은 지난 70년간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가치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왔다.⁴⁶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전통적인 ‘안보 우선’의 논리가 강력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도전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접근 방식은 동맹의 가치보다는 비용과 이익을 따지는 ‘거래적’이고 ‘제로섬’적인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⁴⁹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넘어¹³, 이제는 동맹국에게 미국의 산업 재건 비용까지 분담하라는 요구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동맹의 근본적인 성격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동맹국들이 동일한 산업을 놓고 치열한 경제 전쟁을 벌이는 동시에, 과연 ‘철통같은’ 안보 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가?⁵⁰ 현재의 상황은 미국 정부 내에서 이해관계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중국과의 지정경제학적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때로는 동맹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외교 원칙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미 동맹이 더 이상 주어진 상수가 아님을 의미한다. 오히려 동맹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새로운 최우선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국의 자원을 동원하는 ‘플랫폼’으로 재편되고 있다. 과거의 동맹 논리는 안보 협력이 최우선이며, 경제적 갈등은 이 핵심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⁴⁶ 그러나 미국이 KORUS FTA의 혜택을 무력화하는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자국 산업 기반을 재건하는 것이 동맹국에게 약속한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보다 더 높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다.¹⁸ 이는 안보 보장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동맹이 미국의 최우선 전략 과제를 위해 동맹국의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재편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국내 여론, 외교정책의 제3 변수로 부상

정부 간의 냉정한 이해관계 계산과 달리, 양국의 국민 여론은 한미 동맹의 중요한 버팀목이자 외교 정책의 향방을 결정하는 ‘제3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존재한다. 미국인의 63%는 한미 동맹이 자국 안보에 이롭다고 생각하며, 62%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⁵¹ 한국인 역시 91.6%가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⁵²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 지지가 무조건적인 지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 국민들은 자국의 국익과 무관한 지역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미국과의 경제 관계가 점차 경쟁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⁵³ 이러한 국민 정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국익에 반하는 협상안을 수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정치적 경계선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양국 국민 여론은 정부의 극단적인 거래적 접근에 대한 ‘민주적 제동 장치’ 역할을 한다. 지도자들은 냉정하게 계산된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을지라도, 결국 그 결과를 자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만 한다.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 동맹을 착취하는 것으로 비치는 협상을 강행한다면, 중국에 맞서 ‘민주주의 연대’를 구축하겠다는 자신의 명분을 스스로 훼손하는 국내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굴욕적이거나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협상안을 수용한 한국 대통령은 과거 불평등한 대미 협상의 사례들처럼⁵⁴ 극심한 국내적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이처럼 양국이 공유하는 상호 정치적 제약은 협상가들로 하여금 순수한 거래를 넘어, 최소한 공정하고 필요한 타협으로 포장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도록 강제한다. 따라서 여론은 단순한 배경 소음이 아니라, 동맹이 상호 존중의 관계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능동적인 변수다.

‘거래형 동맹’을 넘어선 상호주의의 조건

본 보고서의 분석을 종합하여, 한미 동맹이 ‘거래형 동맹’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진정한 상호주의(reciprocity)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주고받는 액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핵심적인 전략적 기여와 현실적 제약을 상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단순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민주주의 세계 전체의 공동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 반면, 한국은 수세적인 방어 자세에서 벗어나, 차세대 기술, 국방 연구개발(R&D), 글로벌 표준 제정 등 미국의 필요와 한국의 강점이 일치하는 분야에서 ‘윈-윈(win-win)’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능동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¹⁷

궁극적인 해법은 양국 관계의 프레임을 ‘비용 분담(burden-sharing)’에서 ‘역량 공유(capability-sharing)’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국이 얼마를 낼 것인가?”라는 질문 대신, “우리가 마주한 공동의 도전에 한국은 어떤 독보적인 역량을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는 고객과 후원자(client-patron) 관계에서 벗어나, 양측이 각자의 고유한 강점—미국의 글로벌 파워와 기초 R&D 역량, 한국의 초격차 제조 기술력과 실행 속도—을 결합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예를 들어,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에 얼마를 투자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2035년까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를 확보하기 위한 공동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단순한 자본 공급원이 아니라, 전략의 핵심 기동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만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공유된 가치와 비전 위에서 지정경제학적 경쟁의 파고를 함께 넘어설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⁵⁶

참고 자료

1. The rise of techno-geopolitical uncertainty: Implications of the United States CHIPS and Science Act - PMC,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0066984/>
2. Silicon Curtain Descends: US-China Tech Rivalry Forges a Fragmented Future for Semiconductors - Stock Market | FinancialContent,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markets.financialcontent.com/wral/article/tokenring-2025-10-4-silicon-curtain-descends-us-china-tech-rivalry-forges-a-fragmented-future-for-semiconductors>
3. Long standing China-U.S. rivalry - Tehran Times,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tehrantimes.com/news/518836/Long-standing-China-U-S-rivalry>
4. The US CHIPS Act and Its Impacts on the WTO and China - Kluwer Law Online,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kluwerlawonline.com/journalarticle/Journal+of+World+Trade/58.5/TRAD2024039>
5. Semiconductors and the CHIPS Act: The Global Context | Congress.gov,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7558>
6. The CHIPS Act: What it means for the semiconductor ecosystem - PwC,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pwc.com/us/en/library/chips-act.html>
7. Technology Innovation, Economic Growth, and Geopolitics Policy Options for South Korea,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A2969-1.html
8. China's National Security Paradigm |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 RUSI,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rusi.org/publication/china%E2%80%99s-national-security-paradigm>
9. WORLDWATCH: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 Financier Worldwide,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financierworldwide.com/worldwatch-foreign-investment-and-national-security>
10. Changing security paradigm - Knowledge for policy - European Union,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knowledge4policy.ec.europa.eu/changing-security-paradigm_en
11. Coordinating investment screening across the US, Japan, and ...,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brookings.edu/articles/coordinating-investment-screening-across-the-us-japan-and-korea/>
12. 통상정책,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jsessionid=hdSV56kpl0rMVF2wW7hNGaFhcLCFxfhkpDdyHjyV7pG2tg9LzPfrzawFbgrhG1e1.ims_bizwas1_servl

- [et_engine1?atchFileId=FILE_000000000685583&fileSn=0](#)
13. South Korea: Background and U.S. Relations | Congress.gov ...,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0165>
 14. [딱풀이] 한미동맹 70주년 - 카드/한컷 | 멀티미디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16764>
 15. Securing South Korea's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Through ...,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A4000-1.html
 16. The geo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 Diplo - DiploFoundation,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diplomacy.edu/updates/the-geopolitical-implications-of-the-semiconductor-industry/>
 17. Building a New U.S.-Korea Technology Alliance: Strategies and ...,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carnegieendowment.org/research/2024/11/building-a-new-us-korea-technology-alliance-strategies-and-policies-in-an-entangled-world?lang=en>
 18. US-South Korean Relations at a Crossroads ... - UC Press Journals,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online.ucpress.edu/as/article/65/4-5/624/212296/US-South-Korean-Relations-at-a>
 19. Investing in Security and Success: Analysis of the US-Japan \$550 ...,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hudson.org/trade/investing-security-success-analysis-us-japan-550-billion-strategic-investment-fund-william-chou>
 20. New Documents Reveal Next Steps for U.S.-Japan Trade Deal - CSIS,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csis.org/analysis/new-documents-reveal-next-steps-us-japan-trade-deal>
 21.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ecures Unprecedented U.S. ...,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7/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secures-unprecedented-u-s-japan-strategic-trade-and-investment-agreement/>
 22. Analysts: Japan-U.S. investment framework raises pressure on ...,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insidetrade.com/daily-news/analysts-japan-us-investment-framework-raises-pressure-south-korea>
 23. 관세협상 삼국 비교: 한국/일본/EU 중 베스트 딜은 누구? - 블로그,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blog.intelliquant.ai/post/us-tariff-negotiation-with-korea>
 24. [분석] 한·일·EU 대미 관세 협상 비교...韓, 불리하지 않은 조건 확보 - MS투데이,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m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376>
 25. [동맹과 뉴스터디]트럼프에 큰돈 주고 관세 낮춘 한국-일본, 누가 덜 뺏겼나? - 채널A,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ichannela.com/news/detail/000000485513.do>
 26. 정부, 한미 관세협상 마무리 후 “국내기업 지원·미국시장 진출 확대 총력” - MS투데이, 10월 8, 2025에 액세스,

- <https://www.m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424>
27. "한미동맹은 여전히 안보 핵심축...조건과 실익은 따져야"[장세정의 직격인터뷰] | 중앙일보,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0917>
 28. 트럼프 2기 미 EU 간 통상 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정책과 이슈,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nrc.re.kr/board.es?mid=a30200000000&bid=0049&act=view&list_no=179570&tag=&nPage=1&issue_cd=45&cg_code=
 29. [심층분석] 트럼프 전방위 압박에 맞선 이재명의 버티기 신공, 세계가 주목 - 뉴스임팩트,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newsimf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0336>
 30. 서두르는 트럼프, 버티는 시진핑...다가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 - 조선일보,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4/25/TCX6HGLEI5DHDL7TNZCFORC5ZY/
 31. 정부 '올코트 프레싱'에도 도장 못 찍는 관세협상...의약품 100% 관세도 적용 받나,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50928020607437>
 32. [에디터픽] 한미 관세 후속 협상 두 달째 '답보'...대미 투자 방식 이견에 난항 / YTN - YouTube,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ryS9efr44gU>
 33. 정부, 50조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반도체·배터리 등 100조 지원 / YTN - YouTube,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Ozm9-wcXwtK>
 34. 한미 관세협상 타결, 국익 중심의 통상외교 성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947032>
 35. 트럼프 통상 압박에 신중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 매거진한경,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4103158b>
 36. 우리나라의 FTA 정책 평가 및 한·미 FTA 비준 추진 방안 - 외교안보연구소,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ifans.go.kr/knda/com/fileupload/FileDownloadView.do;jsessionid=ww7DwPp4HqOb3FcJqzb53aAb.public11?storgeld=c61b04e5-0182-4c75-ad21-828ecacfb855&uploadId=29613068925570&fileSn=1>
 37. 트럼프 재선 시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89103>
 38. Session 1. 트럼프 취임 한 달, 통상규제 대응전략 - PwC,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pwc.com/kr/ko/services/trump-trade-regulations.pdf>
 39.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 - 국회입법조사처,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PJLfc61qUW&fileName=
 40. 美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행보: 대통령 행정조치로 본 새로운 대외 전략 - 법무법인 세종,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shinkim.com/attachment/43732>
 41. 3 days ago - - YouTube,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post/UgkxdYiFJVM1YZoD4jGOk3SJjQvL1aKgL_W
 42. 新 무역 지도를 펼쳐다: 지정학 격변기의 글로벌 무역 재편과 기업 생존 전략 - 비온드엑스,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beyondx.ai/jijeonghagyi-gyeograng-sogeseo-segye-muyeogyi-saeroun-jidoreul-geurida/>

43. [기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한국 제조업이 직면한 새로운 생존 법칙 - 산업종합저널 동향,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industryjournal.co.kr/news/242821>
44. 고율 관세 시대, 한국 산업의 생존 전략 - SAP Korea 뉴스센터,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news.sap.com/korea/2025/05/%EA%B3%A0%EC%9C%A8-%EA%B4%80%EC%84%B8-%EC%8B%9C%EB%8C%80-%ED%95%9C%EA%B5%AD-%EC%82%B0%EC%97%85%EC%9D%98-%EC%83%9D%EC%A1%B4-%EC%A0%84%EB%9E%B5/>
45.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논의(상세화면) -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ldx=86&bcldx=1056569&parentSeq=1056569>
46. 북미 - 외교부,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mofa.go.kr/www/wpge/m_3528/contents.do
47. 한미동맹(韓美同盟)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6894>
48. 한국의 대미관계: 전략목적과 현안 고찰 - 외교안보연구소,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ifans.go.kr/knda/com/fileupload/FileDownloadView.do;jsessionid=yYcl2O7Kh5uT8myMuu8mtbh8.public12?storgeld=c61b04e5-0182-4c75-ad21-828ecacfb855&uploadId=25306493994470577&fileSn=1>
49. 미국 행정부의 대외전략 변화 - 외교안보연구소,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ifans.go.kr/knda/com/fileupload/FileDownloadView.do;jsessionid=CjgZ-ASs0fuZAQz2LPxHhZUH.public12?storgeld=c61b04e5-0182-4c75-ad21-828ecacfb855&uploadId=9754043853946601&fileSn=1>
50. 제713호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inss.re.kr/upload/bbs/BBSA05/202508/F20250808135210861.pdf>
51. Public Opinion and the Future of the U.S.-South Korea Alliance ...,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keia.org/the-peninsula/public-opinion-and-the-future-of-the-u-s-south-korea-alliance/>
52. 국민 91% “한미동맹 중요하다”...한미 관계 국민 인식조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0758>
53. [EAI 이슈브리핑] 2023 한미동맹 국민인식 분석: 포괄적 동맹에 대한 기대와 우려,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eai.or.kr/press/press_01_view.php?no=9748
54. 반미여론과 한미동맹 - 세종연구소,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sejong.org/web/board/1/egofiledn.php?conf_seq=15&bd_seq=492&file_seq=1198
55. 한미동맹의 진화요인 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CHOSUN,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oak.chosun.ac.kr/bitstream/2020.oak/13225/2/%ED%95%9C%EB%AF%B8%EB%8F%99%EB%A7%B9%EC%9D%98%20%EC%A7%84%ED%99%94%EC%9A%94%EC%9D%B8%20%EB%B6%84%EC%84%9D%EA%B3%BC%20%EB%B0%9C>

[%EC%A0%84%EB%B0%A9%ED%96%A5%EC%97%90%20%EA%B4%80%ED%95%9C%20%EC%97%B0%EA%B5%AC.pdf](#)

56. 미중 경쟁과 한국의 외교 유연성 - 국가안전전략연구원, 10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inss.re.kr/common/download.do?atchFileId=F20211012113414770&fileSn=0>